

안전충남 이슈브리프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안전시스템 변화

이창길 교수 /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changkillee@inu.ac.kr

CONTENTS

1. 안전시스템이란 무엇인가?
2.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
3. 권한과 책임을 지닌 안전자치의 구현
4. 실질적인 현장대응능력의 향상
5. 행정지원 시스템의 강화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안전시스템 변화¹⁾

이창길 교수(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1. 안전시스템이란 무엇인가?

- 안전시스템은 도민을 위협하는 재난과 위기의 방지, 완화, 복구 등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이라 정의할 수 있음
- 안전한 충청남도를 위한 비전은 각기 다른 하위체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변화에 적응하고, 세부목표를 달성하며, 통합된 모습을 갖추어야 실현될 수 있음
- 안전시스템을 구성하는 하위시스템은 각각의 중요하고 고유한 업무를 가진 유기체로써 사업과 업무목표를 달성하며, 안전유지에 혼란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면 협업하여 균형적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달성되는 목표는 상위목표와 부합되어 최종적으로 비전달성에 기여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충청남도 안전시스템은 각 영역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행정 및 계획시스템,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시스템, 재난예방 및 대비시스템, 재난발생시 대응 및 복구, 지원시스템 등으로 이루어짐

2.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

| 현재 우리나라 안전시스템의 문제

-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안전에 관한 중장기적 계획이 부족하고, 지역 내의 경제적, 지리적 요인 등을 반영한 상대적 취약지역의 안전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중앙부처 및 상위기관을 중심으로 한 분산적인 관리와 관료제적 대응체계로 인하여 현장대응의 한계가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여, 중앙·지방정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신뢰감이 저하되었음
- 추상적인 법률과 제도에 의한 재난관리에서, 현장중심의 구체적인 재난관리로의 변화요구와 필요성이 증대함
-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대형화·지능화의 지속적 진행,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과 재난안전 지역격차 증대, 대규모 위험시설 노후화와 증가에 따른 재난피해 예측의 불확실성 존재, 노령화 및 다문화 등으로 인한 새로운 취약계층 확산, 신종 및 복합재난 발생 등 재난 환경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됨
- 재난발생요인이 복잡하게 전개되어 공공부문 이해관계자는 친숙하지 못한 재난안전 업무에 직면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 역량 부족, 매뉴얼의 실효성 저하 등으로 인하여 지역현실에 맞는 재난 현장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변화의 기본방향

- 지방정부를 구심점으로 하는 안전에 관한 현장 및 활동, 기능중심 행정변화 추진
- 재난안전 환경과 수요변화에 따른 전략적 안전대책 수립
- 사전대비 역량과 사후관리의 통합적이고 순환적인 관리체계 구축
- 지역여건에 적합한 재난안전 정책 추진 및 역할 책임 명확화
- 재난안전 행정의 효율적 운영체계, 성과 및 환류체계에 기반한 역량강화 체계 개선
- 새로운 지식관리 및 공유체계 활용을 통한 주민의 안전정보 접근성 및 신뢰성 확보
- 선제적 예방중심의 재난안전 관리체계 신뢰구축
- 신속하고 전문적인 복원 및 보상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재난행정의 유연성 확보

3. 권한과 책임을 지닌 안전자치의 구현

| 충남 특수성을 반영한 스스로의 안전자치 구현방향 정립

- 국가의 모든 재난 및 안전관련 영역을 중앙정부 관리로는 실효성이 없음. 실제 우리나라는 대규모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으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실망감을 안겨주었음
- 중앙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은 재난의 유형별로 관리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총괄적인 기능이 부족하며, 기능이 중복되거나 대응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에서는 담당부서별로 업무분산과 업무중복으로 인한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광범위한 재난에 있어서 인접 지방정부와의 상충적 역할 갈등 등이 나타남
- 지방정부 중심의 안전자치 구현은 재난 발생 시에 명령체계 혼선에 따른 권한 불균형, 지역 내 유관기관 간 평상시의 역할 및 협력관계 구축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실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고 적합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충청남도는 지역의 재난 및 안전 현황에 적합한 개별 전문부서의 사전관리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위기상황에는 현장대응기관에 권한이 집중된 협력 네트워크 체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안전자치를 위한 재난안전 행정업무 수평적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 안전자치를 위하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재난안전 유관기관들과의 수직적 협력 및 지원체계는 효과적이지 않음. 이에 지방정부 중심의 현장 공조 및 협업체계 구축, 수평적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중앙정부는 지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어야 하며, 지방정부는 군, 경찰, 소방, 공공단체, 시설관리기관, 지방기업, 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 및 역할 분담을 포함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재난대응기관들은 자신들의 고유 업무영역을 고집하며 간섭과 지시를 기피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재난안전 업무협력체계를 분명하게 구축하여 내재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함
- 민간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역할 수행도 수평적 협력체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인도적 차원의 의미 있는 지원이 현지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질서로 퇴색될 수 있으므로 전체의 재난관리 체계 속에서 잘 어우러지고 통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나아가 안전자치의 협력체계는 지역주민 참여와 언론의 건전한 역할 정립으로 확대되어야 함. 안전문화의 중심인 지역주민의 재난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의식은 재난 발생확률을 줄이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언론은 재난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과 재난발생시의 복구 지원, 재난 대응요령에 관한 교육 등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 재난안전관련 책임기관 및 행정부서 업무진단 및 관리역량 평가

- 충청남도의 재난안전관리와 관련된 책임기관별로 관련 행정부서를 파악하고, 각 부서별 업무 및 직무를 진단하여 관리역량을 분석·평가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재난안전 행정체계 변화와 혁신을 위한 기반이 됨
-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그동안 인력의 전문성 문제와 순환보직 문제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우선적으로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관에서의 관련 부서 및 인력의 위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재난관리 영역이 기관의 전사적 전략과 우선순위에 낮은 위치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구성원들에게는 승진에 제약되는 기피부서로 인식되었음

- 이에 명확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현재의 위치를 분석하고, 기관의 비전달성을 위한 핵심 부서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며, 인사평가 시에 제대로 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활동을 재정립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됨. 이러한 재난안전 조직 및 인력의 위상 재정립을 기반으로 한 전문성 확보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재난안전관리의 활동중심 성과산출 표준화

- 재난안전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재난안전과 관련된 용어 및 각 단계별 활동에 대한 표준체계를 정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충청남도는 지역 유관기관간의 권한 및 책임 명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위험 가능성과 취약성에 관련된 재난 정보 분석, 재난위험의 영향 분석, 자원관리체계 운영, 계획을 위한 지식의 수집과 분석, 재난현장의 지휘 및 통제, 복구 활동, 협력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재난안전 운영 및 절차 내실화, 재난관련 설비 및 서비스의 지리적 정보 축적, 교육훈련 등을 위해 재난안전관리와 관련된 표준화가 필요함

| 통합적 재난안전 성과평가 및 결과활용체계 구축

-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계획과 매뉴얼 운용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임. 이는 실제 계획만 존재하고 평가와 환류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임
- 일반적으로 성과관리는 기관이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직업무평가, 제한된 자원의 합리적 배분, 구성원들에게 업무인식 및 성취감 반영 등 동기부여, 조직의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방향성 제시, 신뢰성 확보를 통한 조직 홍보역할, 구성원들에게 조직에 대한 이해와 가치 공감대 형성, 의사소통 기반인 학습 기회 제공, 최종적인 업무성과 개선 등의 목적이 있음
- 성과관리 기반인 전략기획(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수립에서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구체성,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과제임. 성과지표의 명확한 설정, 성과달성을 위한 활동의 측정방법 구체화를 통하여 유용한 정보에 의한 측정값의 활용가능성, 전체 업무 활동 반영의 적절성 등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세부 성과산출방안이 제시된다면, 이를 이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재난안전 행정의 방향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4. 실질적인 현장대응능력의 향상

| 표준화된 충남형 재난대응시스템 마련

-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 소방, 경찰 등 각 분야별로 독립된 재난현장 지휘체계 및 재난대응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나 표준화된 통합지휘체계가 미흡하여 현장대응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장대응의 혼란을 유발하여 재난대응을 위한 중요한 자원과 인력이 부적절하게 운영되거나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 재난은 점점 다양화, 복합화, 지능화되며 현장 상황에 따라 변화가 심하여 보다 유연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일원화된 지휘체계와 유관기관 간의 대응 업무 조정을 위한 합동지휘체계 등 다양한 재난유형과 현장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재난대응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함
- 재난유형과 특성에 따라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재난대응기관과 담당자들의 현장 협력과 대응 업무처리에 적용되어야 할 것임. 또한 충남도청 실무계획과도 통일성을 확보하여야 함

|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스마트 정보시스템 구축

- 충청남도는 각 시·군 재난안전상황실의 시설과 장비수준을 조사하여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상황실을 정비하고 운영체계를 개선하여야 함
- 충청남도과 시·군이 개별적으로 수립한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충청남도 상위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남지역 전체에 대한 예·경보시스템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재난 발생 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예·경보 체계가 작동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재난정보의 신속한 수집·판단·전파를 위한 통합재난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재난상황에 대한 실시간 감시체계가 이루어져야 함. 무엇보다 도민들에게 재난대응 정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 될 수 있는 재난대응 상황정보 전파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재난 대응과 복구, 이재민 지원을 위한 통합자원관리시스템 운영

- 충청남도의 공공기관, 민간기관, 관련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연계·통합하여 관리하고 필요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불필요한 자원의 투입을 줄이고, 재난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적합한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관리체계가 작동되어야 함
- 또한 재난수습에 필요한 동원자원 관리, 재난유형별 전문가 지원, 재난현장 수습을 위한 민간 자원봉사자의 동원과 관리가 요구됨. 재난구호 및 복구를 위한 필요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장비 동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여 현장대응에 지연이 발생하는 상황은 실질적인 현장대응능력 강화로 극복하여야 할 과제임
- 구호물자 지원은 이재민과 재난 피해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물류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와 함께 재난유형에 따른 현장특성에 부합하는 피해자 보상, 이재민 구호, 부상자 치료, 심리안정·치료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

| 재난유형별 전문가 지원시스템 및 민간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 구축

- 충청남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유형별로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파악하고 관리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재난유형별 전문가 지원시스템이 필요함
- 또한,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원봉사기관 및 참여자의 수요와 공급이 질서 있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지식에 대한 교육과 활동지원을 위한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현장대응능력 중심의 재난안전교육체계 내실화

-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직무역량 향상과 연계된 질 높은 교육내용을 갖춘 교육기관은 부족하며, 재난과정에서 급변하는 현장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험과 반복훈련 시설도 미흡한 실정임. 형식적인 기초지식습득에 한정되지 않고 담당자의 경력 개발과 연계된 지식과 기술 함양,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역량 중심으로 재난교육훈련의 다양화와 내실화가 필요함
- 재난안전 교육계획은 재난현장조사, 재난관리책임기관 종사자의 교육수요 파악, 중앙정부의 교육프로그램 분석, 선진국의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충청남도에 적합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 교육훈련은 충청남도의 재난안전 특성을 반영한 시나리오 중심의 재난대비 및 대응, 복구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며,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및 관리체계도 마련하여야 할 것임

5. 행정지원 시스템의 강화

| ‘안전총남비전’ 추진계획의 실행력 확보

- 안전총남 비전은 도민과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재난안전정책의 미래모습과 방향을 담은 ‘안전에 대한 지향점’임
- 5개 부문에서 제시되는 세부 추진전략과 방향은 단기, 중기, 장기의 시간계획에 따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으로 제시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안전총남비전’ 추진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 전략기획 및 업무협업 기관과 연계된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충청남도 재난안전 개선의 중장기 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충청남도 행정조직 재설계의 실효성 확보

- 충남도청 재난안전실의 기능 및 인력 재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행정기능의 적합성과 중복성에 관한 양적 검토는 이루어졌으나, 질적 부문에 있어서도 다양한 요인을 포괄하여 검토해야 함. 업무분장에 따른 질적 측면의 체감도와 산출결과물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책임과 업무 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둘째, 조직구조의 통솔범위에 대한 실제적 운영과정을 고려하여야 함. 통솔범위를 분석할 때 기능적합성에 부합하는 적정 인력 산출이 필요함. 현재 인력의 직렬별 구성에 제한되지 않고, 개편되는 부서의 업무와 기능을 중심으로 인력 충원과 감소, 통솔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셋째, 업무의 수요 및 중요성에 따른 전략적 우선순위가 반영된 조직개편이 되어야 함. 이를 바탕으로 적정인원의 인력재배치와 상·하위 조직구조의 적절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음. 또한, 역량분석과 전략적 방향 설계를 위한 타당하고 정교한 조사기법을 반영하여야 함
- 넷째, 해당 업무와 기능에 대한 이해관계자 요구 분석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선진기관 및 유사기관 벤치마킹 등의 조사·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기능의 적합성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다섯째, 타 부서 나아가 유관기관과의 업무연계성과 중복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반영되어야 함. 협업 및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 대내·외 수평적 협력체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여섯째, 개편되는 조직의 기능에 대한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해도를 넓히는 과정을 내실있게 거쳤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또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도출되는 정원, 기능, 업무분배, 요구사항, 만족도, 역량 등의 조사 결과를 명확하게 포함하고 제시하여야 함
-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업무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이해도를 바탕으로 공감할 수 있는 조직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I 네트워크 방식의 재난안전계획 수립과 집행력 강화

- 실제 재난안전계획의 구체성과 표준화된 대응매뉴얼이 부족한 경우 초기대응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마련된 계획에 따른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계획집행 노력이 필요함
- 사전 협의된 많은 계획들이 재난대응에 활용되지만, 재난 현장에서는 통일화되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실행가능한 계획과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충분한 네트워크 방식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에는 재난예방과 관리, 대응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 분산되어 있어 재난관리과정 전반에 일관성이 부족한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관료제 중심의 재난안전 관리체계 보다는 지역현실을 반영한 중앙과 지방, 지방정부 조직내, 지방정부와 협력기관, 공공부문과 민간부분, 또한 상호 교차적 네트워크 방식의 재난안전계획 수립을 통한 실행 가능성 확보가 필요함
- 충청남도의 재난안전 계획 수립은 내부 부서를 포함하여 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 협력기관 등이 작성한 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이론 및 실무 지역전문가를 활용하여 충남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 될 수 있는 체계적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I 수요자 중심의 현장중심 안전관리 계획 수립

- 지방정부의 재난안전관련 행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난관리계획 및 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계획이 만들어지고 집행 또한 제한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많은 한계와 새로운 위기를 발생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난안전 행정에 관한 주민의 신뢰가 붕괴되고 있음
-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상이하고 재난에 의한 피해수준과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동일한 역할과 기능, 재해복구 및 보상 등에 관련된 현재의 재난안전계획은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 수요자 중심의 현장중심 안전관리 계획은 용어의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에서 시작하여, 지역의 지리적 정보, 지역 재난관련 특성, 재난관리 단계별 수행 활동 시나리오 등이 구체적이고 쉽게 설명되어 있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수립되어야 함
- 최근에는 재난안전 분야에 복원력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복원력이 강한 공동체가 재난의 피해가 덜 심각하고 회복도 빠르다는 것임.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요자 중심형 계획 수립과 실천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공동체의 참여를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함

I 재난안전 지식정보 공유 및 활용체계 활성화

- 재난안전 지식관리체계 구축은 정보공유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과 기관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재난안전 선순환 구조의 기반이 됨. 다양하고 정확한 지식정보는 행정시스템과 연계되어 활용되어야 하며,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상호 지식공유 및 활용체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임
- 재난관리 초동대처 관련 정보의 부정확성 및 왜곡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음. 즉 재난시설정보와 인력, 기술, 장비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활용하여 재난대응 및 복구에 활용하여야 함. 예방단계에서의 지식정보는 주민 대상 재난의 위험성과 대응요령 관련 교육에 활용될 수 있음
- 지식정보 공유체계는 지역의 다양한 지리적 정보와 재난위험지역 등에 관한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함.

지속적인 안전진단을 통하여 구체적 지역 현황이 반영된 재난의 사각지대, 재난대응역량 등에 대한 지식 관리가 절실하게 요청됨

- 구축된 재난안전 지식활용체계를 바탕으로 언론의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함. 문제점을 지적하는 고유기능과 함께 재난의 예방과 대응책을 홍보하고, 나아가 언론기관에서 수행한 과학적, 객관적 규명 내용을 지식으로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과학적·전문적 위험성 분석체계 확립과 선순환적 예방 강화

- 재난예방에 관한 선투자는 재난대응에 관한 새로운 대응수단 개발과 효과적인 대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즉 혁신의 선순환 구조 마련이 필요함
- 미국의 경우 재난유형에 따른 특수조직과 전문적 지식과 기능, 장비를 갖춘 전문가 팀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음. 한국의 현실에서 전문적 조직과 장비를 구비하기는 어렵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가장 시급한 부문에 우선적으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충청남도는 충남연구원에 재난안전연구센터를 개소하여 재난안전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음. 연구센터는 행정적인 변화방향 제시와 함께 나아가 과학적 재해예측과 안전 및 방재 기술의 선진화, 재난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재난안전 분야의 과학화, 전문화, 정보화를 통한 충남의 재난안전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 재난안전 예산의 독립적 편성과 총괄관리체계 구축

- 지방정부에서는 부서별 중복된 예산낭비 우려가 존재하고, 재난예방에 대한 예산 수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방정부 예산 편성 시에 재난예방 및 대비에 관한 예산은 신규사업 예산으로 간주되어 편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주로 복구예산 중심으로 전년도 예산이 반영되어 예방사업에 있어서는 예산부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현재 복구중심의 지방정부 재난안전 예산은 지방정부 재정자립도를 반영하고 활용 가능한 예산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함. 예산문제는 재난에 대비한 시설물의 현대화와 교체, 새로운 안전설비의 설치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지방정부 예산에서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예산을 통합하고, 재난안전 업무와 사업을 총괄하여 세부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수요와 예측에 관한 전문적 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것임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금흥동)

TEL 041.840 1114 FAX 041.840 1199

<http://www.cni.re.kr> 발행일 | 2017.05 발행인 | 강현수

편집인 | 양기근, 박근오 편집디자인 | 디자인화랑(042.625 5310)

※이 책에 대한 저작권은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에 있으며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Center for Disaster & Safety Research

안전총남
이슈브리프